

“이번엔 꼭”...전두환 광주법정 세우기 분주

검찰, 3월 11일 재판 앞두고 구인장 집행대책 다각적 마련
‘5·18 망언’ 파동 속 불출석 할 땐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

검찰이 전두환(88) 전 대통령을 재판장에 세우기 위해 구인장 집행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씨가 골프 등 취미생활은 여전히 즐기면서도 고령에 따른 건강 악화와 치매, 독감 등 각종 문제로 재판출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이다.

1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1월 7일 재판에 불출석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전씨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법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를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는 그동안 두차례나 재판 기일을 잡았지만,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씨 측은 범인의 구인영장 발부 이후 이번엔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인 등을 통해 밝힌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오는 3월 재판에도 전씨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5·18 망언 파동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

록에서 밝힌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이른바 ‘가짜뉴스’를 주장한 대목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악화된 여론을 우려해 불출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전씨의 재판 진행을 위해 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은 전씨의 품수와 각종 핑계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이 전씨에게 발부한 구인장은 현재 전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서부지검을 거쳐 서대문경찰서로 전달된 상태다. 이번 재판을 진두지휘중인 광주지검도 조만간(구인장) 업무협조를 위해 전씨 재판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서부지검으로 파견하는 등 구인장 집행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으로, 관할 검찰지휘를 받아 수사기관(경찰)이 집행한다. 피고인 등과 미리 연락을 취해 법원 앞에서 구인장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선 경찰 등을 보내 강제구인 절차를 밟기도 한다. 구인장 발부 후 피고인의 신변 확보 등이 안될 경우엔 구속영장 등이 발부될 수도 있다.

전씨가 재판 당일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자택 등 주거지로 들어가 전씨를 강제로 법정에 세울 수도 있으며, 이마저도 안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철창 신세를 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재판 당일 출석거부 등에 대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업무 매뉴얼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인규 나주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ARS 지지 호소’ 혐의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내 공천 적합도를 묻는 1차 여론조사 과정에서 SNS 단체방을 통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트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아들(37)과 딸(35)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에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공직선거법 규정 중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지만, 강 시장 자녀들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조항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뇌물사건 위증 혐의’ 담양군수 부인 항소심서 무죄

“증언거부권 재판서 고지 안해”

공무원 뇌물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담양군수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기소된 담양군수 부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전 담양군 공무원 B씨의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해 증인신문 후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관사 또는 다른 장소에서 B씨가 2000만원이 든 소포백을 건넨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당일 B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증언거부권이 있었음에도 형사사건 재판장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설령 A씨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성범죄자 우편물에서 봤던 사람이네...”

주민 신고로 여자초등생 납치범 붙잡아

강진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여자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사건이 발생했다.

강진경찰은 17일 “초등학교 3학년 여자학생을 강제로 데려가려던 A(49)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강진을 중앙로 새마을 금고 앞에서 초등학생 B(10)양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가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B양 부모와 아는 사이였던 A씨는 이날 학원이 끝나고 친구들과 귀가 중이던 B양을 발견하고 “엄마·아빠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손목을 붙잡고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의 강한 반발과 주민 C(55)씨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에 따라

배송된 우편물을 보고 A씨가 성범죄 전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B양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의 심한 저항으로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후 4시10분께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고 출소한 뒤 강제추행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하고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신고자 C씨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80대 치매환자 폭행 혐의 요양병원장 1심서 무죄

광주지법 “폭행 단정할 수 없어”
CCTV 삭제 직원은 징역 10개월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 전기철)은 지난 15일 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와 의료재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일원 병동 CCTV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요양병원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

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상태를 감안했을 때 A씨의 주장처럼 안정시키려고 손으로 이마를 누르는 과정에서 명과 각막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환자 C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한 곳으로,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위탁이 해지되고 다른 의료재단이 수탁자로 선정·운영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석희 19시간 경찰조사 받고 귀가...“사실 곧 밝혀질 것”

폭행·배임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경찰에 출석해 늦은 시각까지 조사를 받고 17일 귀가했다.

서울 마포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7시40분께 출석한 손 대표를 상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 폭행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19시간여 만인 17일 새벽 2시 45분께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는 질문에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질문하던 기자가 말을 여러 차례 더듬자 “질문 차분하게 하세요”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농협자금으로 복지시설 물품 기부 국회의원 보좌관 징유

농협자금으로 구입한 하나로마트 물품을 국회의원실 명의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 등에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관계자 B(59)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농협자금으로 구입한 500만원 상당의 하나로마트 물품을 의원실 명의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 등 20곳의 단체와 시설에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의 사회공헌사업을 마치 국회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처럼 왜곡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협측도 사회공헌사업을 특정 국회의원 과 그 소속 정당을 돕는 방편으로 사업을 시행,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왜 전조등 안켜고 운전해”...10대 운전자 폭행한 40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 일명 ‘스텔스 모드’로 운전했다며 10대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경찰서행.

○1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15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한 가구점 앞 도로에서 B(19)군이 라이트 등을 켜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경장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던 것.

○A씨는 이날 B군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깜짝 놀란 A씨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야간운행 시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

/김현명 기자 young@kwangju.co.kr

한국형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땅+건물+태양광 = 2년6개월(현금투자회수가능)
선로걱정없는 한국형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읍 잔여분 3기

2019년 10월 준공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